

 산업통상자원부		보도참고자료		
http://www.motie.go.kr				
2020년 7월 18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17.(금) 17시 이후 보도 가능)				
배포일시	2020. 7. 15.(수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	
담당과장	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 (044-203-5370)	담당자	김덕구 서기관(044-203-5371) 김혜원 사무관(044-203-5372)	
	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권순욱 과장 (044-200-5260)		김명호 사무관(044-200-5263)	
	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김은경 과장 (044-201-7270)		김준호 사무관(044-201-7271)	

전북 서남권 해상풍력(2.4GW) 본격 추진

- ◇ 1년여에 걸친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(2.4GW) 추진에 최종 합의, 정부-지자체-주민-사업자간 MOU 체결
- ◇ 22년부터 단계적 착공 통해 224만 가구에 전력 공급가능한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조성

주민과 함께하고, 수산업과 상생하는 「해상풍력 발전방안」 발표

- ◇ 30년까지 12GW 준공,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성장 위해
 - ① 지원시스템과 ② 수용성·환경성 강화, ③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제시
 - ① 정부주도의 적합부지 발굴과 인허가 통합기구(One-Stop Shop) 도입 추진
 - ② 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모델 확대, 쉼주기 환경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고 친환경적인 해상풍력 단지 건설
 - ③ 선제적 계통 투자와 대용량 터빈 개발, 지원항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 시장과 산업의 동반성장 도모
- ➔ 주민과 함께하고, 수산업과 공존하는 상생여건을 조성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 기여

1.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(2.4GW) 본격 추진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, 전라북도, 고창군, 부안군, 한국전력공사, 한국해상풍력 및 고창군·부안군 주민대표는 7.17일(금) 「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」를 체결함

* 협약서 서명 : 성윤모 산업부 장관, 송하진 전북도 지사, 유기상 고창군수, 권익현 부안군수, 김종갑 한전 사장, 여영섭 한해풍 사장, 이성태 고창군 주민대표, 김인배 부안군 주민대표

- 업무협약 체결로 전라북도 고창 및 부안해역에 2.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됨

< 사업개요 >

- 사업명 :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
- 사업규모 및 사업비 : 2.4GW, 약 14조원(민자)
- 사업기간 : 20~28년(400MW 22년 착공, 2GW 23년 착공 추진)
- * 400MW는 한국해상풍력(주)이 개발 추진

- 금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지난 19.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, 정부, 지자체, 유관기관, 시민·환경단체,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논의한 「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」 결과에 따른 것임

- 지난 11년 정부, 지자체, 유관기관 및 풍력기업들은 「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서」를 체결하고, 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2.46GW*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였으나,

* (실증단지) 60MW → (시범단지) 400MW → (확산단지) 2GW

- 그간 풍력업계 사업철회,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17년에야 실증단지(60MW)를 착공하여 19년 완공하였고, 시험·확산단지 추진에 대해서도 주민우려가 큰 상황이었음

- 이에, 민주당 ‘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’(위원장 우원식)의 제안으로 전북도가 주도하여 지역주민, 정부, 환경단체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 시험·확산단지에 대한 추진 여부를 논의해 왔음

□ **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최초 사례로, 협의과정에서 주민대표, 정부, 지자체, 환경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도출함**

- 오늘 체결된 협약서에는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었음

< 협약서 주요내용 >

- | |
|--|
| <p>① 정부·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타당성조사, 인프라조성,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</p> <p>② 연안어선의 단지내 통항허용,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</p> <p>③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」개정, 주민참여형·지자체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강화</p> |
|--|

□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**22년부터** 시범단지(400MW)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으로 **확산단지(2GW)**는 풍황조사(1년) 등을 거쳐 **23년부터**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

- 28년 확산단지까지 준공되면 총 2.46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되며, 이는 **22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임**

□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“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**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**로서 향후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(신재생법 시행령 입법예고중, 20.10월 시행)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**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**”이라고 하며,

- “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힘

□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라 10년간 **23조원 규모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직·간접 일자리**가 창출될 것이라며,

- 특히,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가 동종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**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**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

2.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7.17(금)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업무협약 체결 계기에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「주민과 함께하고,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」을 발표함
 - 정부는 해상풍력 협의회(20.3월~) 등을 통해 해상풍력업계 및 수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,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옴
-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 구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의 우려와 실제 해역이용자에 대한 협의 소홀 문제를 제기
 - 발전사업자는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장치가 미흡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
 - 풍력업계는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움으로 국내시장 창출이 지연됨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악화를 호소
-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금번 발전방안을 수립함
 - 금번 대책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수립되었으며,
 - ①정부·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, ②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, ③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·추진, ④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

[①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]

- 풍황정보, 규제정보,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·분석하여 금년중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,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중 '해상풍력 고려구역'으로 발표할 계획
- 정부가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대상으로 풍황계측,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여 집적화단지로 추진(지자체 신청 → 산업부 지정)
 -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 추가 REC, 우선적인 계통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
 - 한편, 집적화단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사업추진 촉진을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방침임
- 또한,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(한국형 One-Stop Shop) 설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

[②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 주민수용성 강화]

-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지역 범위 및 지자체별 배분방법을 새로 마련하고,
- 최대 REC 가중치 0.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금번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(20년~, 20년 365억원)으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임

[③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추진]

- 우선,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 확보시 해상풍력 단지내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
 - 실제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(60MW)는 10톤 미만 선박에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할 예정임
- 또한,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,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(20~22년간 50억원)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해 나갈 계획임
- 또한, 입지발굴-공사·운영-사업종료시까지 쏘주기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으로 인해 청정바다의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
 - 특히, 공사단계에서는 무항타공법 등 소음, 진동, 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하고, 운영단계에서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 의무화, 종료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할 계획임

[④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]

- 전북 서남권(2.4GW), 신안(8.2GW), 울산·동남권(6GW)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생태계 수요를 창출하고,
 - 국무조정실 중심 범 부처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
- 특히, 해상풍력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및 공동접속설비를 신설·보강하여 주요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

- 한편,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, 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,
 - 지원 항만단지 개발 및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도 제고해 나갈 계획임
- 또한,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성 지원을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,
 - 탄소저감 보증제도(녹색보증)를 신설해 풍력기업,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임
- 금번 대책을 통해,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【붙임】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김덕구 서기관(☎044-203-53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